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감소하거나, 0%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잠재성장을 하락과 성장동력 저하, 고용창출력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축의 하나로 제시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하고 AI 인재 등 20만명 이상의 혁신 인재 육성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 등의 세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3대 신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에 현행 법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 신산업과 창업생태계 조성 등 혁신창업 지원 및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법제도

“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개입이 아닌 촉진과 지원을, 지시가 아닌 자율과 협조를 근간으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

혁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중요정책은 입법적 지원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지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역할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개입이 아닌 촉진과 지원을, 지시가 아닌 자율과 협조를 근간으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부딪혀 고배를 마셔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해소 지원 법제를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업종별, 산업별 시장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나타나는 규제를 시각화하는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작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에 대한 법적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고 신성장, 신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올해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지도와 정비 로드맵을 작성하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성과를 이번 법안에 구성하였습니다. ‘혁신창업분야’, ‘디지털헬스케어분야’, ‘스마트시티분야’, ‘신약바이오분야’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최첨단분야인 국내 ICT 기술과 우수한 전문인력 등의 강점을 살리고 ‘제2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규제혁신, 진입규제 시장의 지원 등 종합적인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입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와 사회 운영의 법제도적 기반이 되는 행정법의 모습을 돌아켜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법안에 소개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끊임없이 세상변화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촉발되는 입법수요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